

외국증권사 분석서 제외된 ‘은행업’... 투자매력 상실?

UBS·CS 국내 은행권 보고서 멈춰 리서치 커버리지 중단하는 IB 증가
시장에서는 국가 연구기관보다 외국계 보고서 신뢰 커, 우려 ↑

“또 당했다. 왜?”

지난해 11월 26일(현지시간) 증시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 하나 때문에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5.08% 급락한 263만2000원에 마감했다. 하루 새 시가총액 18조원이 날아갔다. 코스피는 1.44%나 추락했다. 이날 모건스탠리는 “메모리 사이클이 상승기에 접어들며 삼성전자 주가가 2016년 1월 이후로 120% 가량 올랐다”며 “이제 2018년에 접어드는 지금 잠시 쉬어갈 때가 됐다”고 전했다.

모건스탠리는 투자자의견을 기존 ‘비중 확대(overweight)’에서 ‘중립(equal-weight)’으로, 목표주가는 29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호환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국내 은행권에 대한 리서치 커버리지(기업·업종 분석)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외국계 보고서에 대한 신뢰가 국가 연구기관보다 큰 터라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유럽계 증권사인 UBS와 크레디트스위스(CS)가 각각 지난 2월과 6월에 국내 은행권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중단했다.

국제금융센터 주혜원 연구원은 “올해 들어 한국 은행권 리서치 커버리지를 중단하는 IB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부정적 시그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외국계 보고서의 영향력이 워낙 커서다.

삼성전자의 예에서 그 입김을 짐작할 수 있다.

1994년은 삼성전자가 반도체사업에 뛰어들어 이후 최대 호황을 맞은 시기다. 주가도 사상 처음으로 10만원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반도체 공급과잉이란 메릴린치의 보고서로 삼성전자 주가는 8만원대로 급락하는 조정을 경험했다. 공급과잉 논란

에도 삼성전자의 성장은 이어졌고, 95년 10월에는 주가가 17만원대까지 치솟았다.

2013년에도 삼성전자는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증권사의 잇따른 하향 평가로 주가가 10% 이상 급락했다. 그해 6월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랙스 칼럼을 통해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이 “예상을 할 수 있었지만 이해할 수는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외국계 증권사들의 전망에 따라 국내 경제도 춤을 췄다.

실제 유럽계 증권사인 UBS가 외화 유동성 경색을 겪었던 지난 2008년 11월에 2009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을 3%로 낮추자 바로 다음 날 채권 금리는 곧바로 치솟았다(채권값 급락). UBS의 이러한 전망치는 삼성경제연구소 등 국내 경제연구소의 예상치(3.6~3.8% 수준)와 큰 차이가 났다.

한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인력이 적은 외국계 증권사는 커버(분석)하는 업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IB들은 워낙 글로벌한 업체가 많은 데다 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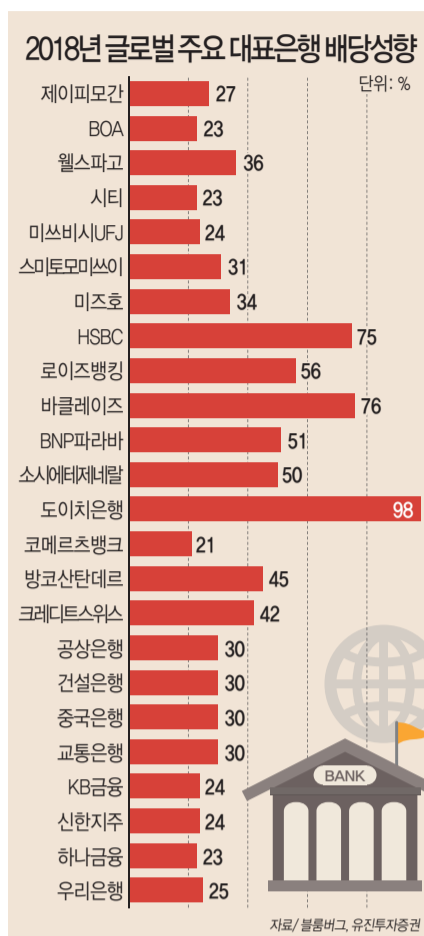
안 개구리 수준인 국내 은행들의 영업방식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리서치도 영업의 한 방편이다. 국내 은행들의 짠 배당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다만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은행의 낮은 수익성과 배당성향 등에 발을 빼고 있다는 것. 실제 현재 주요 은행들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63배 수준이다. 지난 2016년 0.5배(하나 0.4배, KB 0.5배, 우리 0.5배, 신한 0.6배) 보다는 좋아졌다. 하지만 아시아 은행권(일본 제외) 평균 PBR 1.4배(2016년 기준) 보다는 낮다.

국내 은행권 한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수익성이나 자산 건전성에 문제라기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과 관계가 있어보인다”면서 “해외 투자자 자본 유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의 깊게 살펴볼 방침이다”고 전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코스피 8일 만에 최저... 2270선대 하락 마감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2307.07)보다 36.87포인트(1.60%) 내린 2270.20에 마감한 2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90.25)보다 8.87포인트(1.12%) 내린 781.38에,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20.6)보다 5.5원 오른 1126.1원으로 종료했다.
/뉴스1

증권거래에 블록체인 도입엔 보안↑ 비용↓

금감원 해외증권거래사 사례 분석
공적시장에도 기술 도입여부 검토

해외 증권거래소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증권거래시스템의 관리업무 비용 절감과 거래기록 신뢰 향상에 힘쓰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거래원장 분산저장으로 거래 기록의 보안성과 투명성이 올라가고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이 2일 내놓은 ‘해외 증권거래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과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G),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TMX), 호주증권거래소(ASX) 등은 블록체인 기술을 점진

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분산된 거래정보를 검증하고 기록 보관하기 때문에 중앙집중기관의 관리없이도 거래기록을 믿을 수 있는 기술이다.

미국 나스닥은 2015년 12월 사적 시장(private market)에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인 ‘나스닥 링크’를 도입해 비상장주식 발행에 성공했으며 2016년에는 위임투표 등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또 장외주식 호가 게시와 매매 상대방 탐색, 거래 협상·결제, 장외증권 청산 업무에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는 공적 시장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지 검토하고 있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와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는 증권 거래 청산·결제 및 주주투표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기록을 사용자들에게 분산저장하기 때문에 낮은 처리속도, 용량 등 다양한 한계가 있다. 또 거래 착오나 실수시 수정이나 정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근우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은 “블록체인 기술 적용 업무를 명확히 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해 프로젝트별로 추진해야 한다”며 “업권과 기관 경계 없이 증권거래 전 영역에서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검토하고, 글로벌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등 기술 표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선진국 경기, 韓수출 둔화세 등 영향 줄어”

한국은행 BOK경제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기 변화가 한국의 대(對) 선진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은행의 BOK경제연구 ‘선진국 수입수요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최문정·김경근)에 따르면 G7국가의 수입수요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탄력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탄력적(2.22)이었으나 위기 이후 비탄력적(0.90)으로 변화됐다.

여기서 말하는 G7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이다. 수입수요에 대한 수출 탄력성은 수입수요가 1단위 늘었을 때 수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나타낸 수치로, 1보다 크면 탄력적(수출이 수입수요에 민감하게 반응), 작으면 비탄력적이라는 의미다.

과거에는 G7 국가의 수입수요가 1%포인트 오를 때 한국의 대 G7 수출 증가율이 2.22%포인트 올랐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증가율이 0.90%포인트에 그친다는

뜻이다.

수입수요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는 선진국의 민간소비 위축이 우리 수출증가율을 감소(탄력성 6.36)시켰고, 위기 이후에는 선진국의 공공소비(정부지출 등) 증대가 우리 수출증가율 증가를 주도(탄력성 1.93)한 것으로 나타났다.

G7국가의 투자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은 위기가전까지는 탄력적(1.02)이었으나 위기 이후 비탄력적(0.62)으로 변화하면서 전체적인 수출의 소득탄력성 저하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이들 국가의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위기 전후 모두(탄력성 0.99) 큰 변화 없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수요에 대한 우리의 대 선진국 수출의 소득탄력성은 구조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기의 변화가 우리의 대 선진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희주 기자 hj89@

국민연금 2056년에 고갈... 보험료 인상 ‘만지작’?

국민 거부감 커 인상 쉽지 않을 듯
연금수령 연령 높이는 방안 예상

저출산·고령화 심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3~4년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료 인상설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등을 꾸려 시작한 4차 재정추계작업을 현재 거의 끝낸 상태다. 최종 정리를 거쳐 이달 17일께 공청회 등을 열고 공개할 예정이다.

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6~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60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던 2013년의 3차 재정추계 때보다 3~4년이 앞당겨진 것이다.

2018년 5월 말 현재 634조원 규모의 기금적립금은 2040년대 초반 2500조원까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불어났지만 이후 연금급여 등 지출증가가 이어지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3%를 밑도는 경제성장률 전망도 원인 중에 하나다.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보험료를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이미 3차 재정계산 때 2060년까지 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를 2017년부터 14.3%로 올려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

은 바 있다. 또 2060년까지 적립 배율을 2배와 5배로 유지하려면 2017년부터 보험료를 10.2%, 11.4%로 각각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 재정추계위는 국민연금 고갈을 30년가량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13%대로 올려야 할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험료율보다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적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험료율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보험료율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여야 정치권이 부담을 느껴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장기간 지속할 수 있게 연금수령 나이를 지금보다 더 늦추거나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연금수령 연령(만 65세)에 맞춰서 6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5년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희주 기자